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부세 공시가액비율 60%→80%로 상향...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를 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 가격 발표를 앞두고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중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중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로선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중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할 계획이다.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관세청, 중소·중견기업 AEO 지원 확대 내용은?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받기 위한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받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심사 간소화 ▲공인요건 완화 ▲

공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심사 간소화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서류를 약 500여종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350여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AEO 심사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8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공인요건 강화의 경우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신고정확도는 그간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해왔지만, 이를 공인신청 분야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도 현행대로라면 매출이 3년간 평균적으로 3% 이상 증가했는지 심사했지만, 이를 개선해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AEO 공인 이후 공인유지를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도 동등하게 세무조사 부담 완화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O)와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간담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함과 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지원, 이중과세 해소, 납세서비스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그룹 내 관계회사 간 국내외 거래가격(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